

많이 내고 적게 보상...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건의

보상기준 정비·보험료 할증률 완화·보장 품목 확대 등 개선 요구 일조량 감소 재해 인정 등 이상기후·대형 재해 보상에 반영돼야

전남도가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 재해 인정 등 관련 보험약관 개정을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를 악화로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저값을 제외하는 기준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는 높아지고, 보상은 적어진다는 이유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000원이 오른 52만 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이 적은 276만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원이 낮은 4253만원이다. 보험료는 104만원이 증가한 1587만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원이 적은 1489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인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입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건의 내용은 ▲귀리 보험가입 수확량 상향(416kg/10a)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30%) ▲노지 표고비섯, 수국(화훼) 보험 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25% 감소 시 재해조사 실시) 등이다. 또 기존에 건의했던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 등) 등도 재차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이상기후로 상반기에 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 8건(평년 6.5건)의 농작물 재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사도 시가...노지스마트농업 시대 연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무인 자동화 플랫폼과 농기자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준공식'이 12일 나주 반남면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신정훈 국회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주요 내빈들과 노지스마트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에너지·배터리기업 미래차 산업 진출 돕는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업지원 사업' 17개사 최종 선정 미래차 진출·시제품 제작 등 기술사업화 적극 지원

광주시가 에너지·배터리기업 17개사의 미래차 동차 산업 진출을 돕는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에너지·배터리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업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1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배터리 관련 전후방 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3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했으며, 지역 에너지·배터리기업 44개사가 신청해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사업화 가능성, 기술력 및 경제성 확보·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7개사를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 기업에는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사업 등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부처 연구개발(R&D) 확보를 위한 사전기획단계 지원, 에너지·배터리 기업의 미래차 분야 진출을 위한 상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에너지·

배터리 산업분야 업종전환 상담, 이차전지 제조장비 시제품 제작, 전기차 제사용 리튬배터리 부품장착 지원 등도 이뤄진다.

광주시는 또 오는 18일 수혜기업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전문가 매칭, 기술 다테 풀(Pool) 제공, 사업수행 상담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에 나선 예정이다. 지난해 기업지원 사업에는 15개사가 참여해 사업화 매출 28억원, 고용창출 14명, 펀드투자 26억원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기업지원 사업은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과 수출 효과에 초점을 두고 기획했다”며 “에너지 신산업 중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예외 근거 전면 축소”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권 침해로 인한 제2, 3의 희생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해당 법안은 형법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이 제정한 예외 규정인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은 무효임을 규정해 위법성을 바로잡는 한편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이 법을 형법에 우선 적용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내



용과 피의사실 등 모든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재산 지키는 데 필요한 경우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의 피의사실공표 예외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또 형사사건은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사실 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벌의 범위도 상향해 공개 범위를 위반하고 피의사실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양 의원은 “각 수사기관은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를 위반하고 형사소송법이 제195조 제2항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예외 조건이 포함된 형사 사건 공개를 위한 규정 등을 제정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방정가 라운지

박미정 “광주 공공의료원 재추진 대안 마련해야”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서 지적

의료 공백 속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재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민주·동구2)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 됐다”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과 함께 광주시 자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양적·양적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질적 이상이 요양·한방 병원이다. 필수 의료인 프라를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



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울산·세종뿐이다.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5로 평가돼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공익성에 대한 논리와 명분 확보로 중앙정부 설득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나 기자 khn@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